

총선 입지자들 막판 당원 모집에 '사활'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50%+권리당원 50%

'공천=당선' 당원 확보가 결정

6개월 이상 1천원 내야 권리

이달 말에 당원 모집 마감

과열 경쟁에 부작용 우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 모집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막판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공천은 곧 당선, 경선 승리는 곧 당선'이라는 생각 탓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입지자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경선에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신규 당원 모집은 이달 말 마감된다.

대리접수는 14일까지이며, 대리 접수된 신규 당원 서류에 대해서는 주소지와 주민번호에 대한 증빙 등을 거친 뒤 문제가 없는 경우 당원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3월말 기준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당원은 39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월 1000원 이상 당비를 납입하고 있는 권리당원은 7만70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시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비를 오래 미납했거나 번호가 잘못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한 주소지에 다수가 등록된 당원들에 대해 정비 작업을 했다.

따라서 광주지역 민주당 당원 숫자는 이번 당원 모집이 끝난 뒤 오는 8월 중순께 전산 입력을 모두 마치면 정확하게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원 모집은 주소지 증빙, 주민번호 대조 등 확실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유령 당원'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광주지역 일부 선거구에서는 과열 양상이 벌어지면서 '허수 당원' 등의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원 모집과정에서 민주당 광주시당의 입당원서 지침과 관련, '지지후보 명기' 논란에 이어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주소지 기입 문제' 논란이 일면서 잡음이 일기는 했지만, 광주시당이 이를 모두 백지화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도 했다. 이처럼 당원 모집 경쟁이 심한 배경에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들의 투표 성향에 따라 경선 당락이 정해지고 공천이 결정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제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인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권리당원이 많아야 경선



수국의 계절 장맛비가 잠시 멈춘 13일 보성 운제림 내 성림정원에 연보라색, 하늘색, 분홍색 등 다채로운 빛깔과 다양한 크기의 수국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파스텔톤 매력을 뽐내는 수국 향으로 가득한 운제림은 지난 1964년부터 조립 사업을 시작한 이래 2대에 걸쳐 '신림 명문가' 가족들이 가꾸 온 숲이다. 이맘때면 활짝 핀 수국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을 찍으려는 젊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총선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입지자들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경선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공석인 광주 서구울의 경우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난립하면서 각 조직별로 막바지 당원 모집에 과열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예정자들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연일 등

문화나 향우회, 지인 모임 등을 중심으로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 주말·휴일도 쉬지 않고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국회 상주하는 보좌관들까지 지역구로 내려와 당원 모집과 조직 정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시당 관계자는 "일부 선거구에서 신규 당원 모집을 위해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규정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 당원 입당에 대해 주소지·주민번호 일치 등

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지 증빙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권리당원 자격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고 중앙당 지침에 따라 형사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관리행사를 위해선 신규당원 중 2023년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겐만 주어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일반유권자도 소품 선거운동·모임 허용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특위 통과

인쇄물 금지 기간도 완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했다.

현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동법 제90조 1항), '문서·도화(그림) 배부 등 금지'(동법 제93조 1항) 등이다.

이날 정개혁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자신이 제작 및 구입한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 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아우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해 개최 가능한 집회·모임 범위를 확대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다둥이' 임신 바꾸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꾸쳐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신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꾸쳐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의 바꾸쳐를 지급하고,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쌍둥이'든 '삼둥이'든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0만원의 바꾸쳐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원씩으로 바꾸쳐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바꾸쳐를 지급하는 식이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임신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8개월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활개치는 온라인 양표, 처벌 규정이 없다 ▶6면

복스 - '몽클레턴 날들의 기억' ▶14·15면

KIA, 기본 좋은 울스타 브레이크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방문의 해
2022-2023

신안 퍼들교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전라남도

장성 백암사

목포 해상케이블카

너도, 나도, 남도

남도여행길잡이

검색